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 동향과 효과적 소통 전략

일시: 2023년 2월 28일

주최/주관: 법무법인[유] 지평, AIGCC

| 제1세션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 법제 동향: 아시아 중심으로

글로벌 주주관여 법제 동향

엘리자베스 우 클라이언트어스 아시아 기후에너지팀 변호사

한국의 주주관여 법제 동향

민창욱 법무법인(유) 지평 컴플라이언스팀 팀장 및 파트너변호사

| 제2세션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와 기업의 소통 방안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좌장)

발레리 칸 AIGCC 주주관여 정책 디렉터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

윤세종 Plan 1.5 변호사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팀 상무보

임재문 LG디스플레이 ESG전략팀 팀장

이재원 SK바이오사이언스 가치혁신실 PL

Executive Summary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주주관여가 확산되고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입법이 도입됨. 본 웨비나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의 법제 동향을 살피고 글로벌 기업의 대응 사례와 방안을 소개함

key takeaway 1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 동향

- 엘리자베스 우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아시아 기후에너지팀 변호사는 기후위기 관련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CA100+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후 관련 결의 사례(HSBC 2021, ExxonMobil 2021/2022)를 소개함
-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주주제안으로 대표되는 법적 주주권 행사의 요건과 효력 및 HDC와 KT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후 관련 주주제안을 어렵게 하는 한국 상법상 주주제안의 범위와 요건의 한계를 설명함

key takeaway 2

주주관여 주체를 위한 제언

-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는 APG의 효과적인 기후관여 활동을 위한 탄소예산 제도와 CA(클라이밋 액션)100+ 참여 기관으로서의 행보, 그리고 HDC 및 KT 사례에서의 향후 시사점을 소개함
 - 윤세종 Plan 1.5 변호사는 더욱 효과적인 주주관여를 위해서 기업 내 장기적 리스크 대응에 효과적인 보상 체계와 현행법 상 주주관여 장벽 해소를 위한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그리고 연기금 등의 "Universal Owner"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발레리 콰 AIGCC 주주관여 정책 디렉터는 AIGCC의 역할 및 규모와 효과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위한 툴을 소개함
- *AIGCC: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key takeaway 3

주주관여와 기업의 소통

-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팀 상무보는 포스코의 ESG를 위한 노력을 설명함. 주주 관여 활동과 관련해 홀딩스의 IR팀과 포스코의 ESG팀 및 탄소 중립 전략 그룹이 컨콜을 진행하고 투자자의 요구를 내부로 전달함
- 임재문 LG디스플레이 ESG전략팀 팀장은 LG 디스플레이의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조직 구조를 설명함. 2022년 6건의 IR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했고 ESG 실사를 시행 중임
- 이재원 SK바이오사이언스 가치혁신실 PL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TCFD 보고서를 발간, RE100과 넷제로 전략을 수립,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함을 설명함. 주주 관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임



엘리자베스 우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아시아 기후에너지팀 변호사
글로벌 주주관여 법제 동향

(기후위기 관련 주주제안의 필요성)

기후위기 관련 재무 위험은 기업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안을 투자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 의무를 가지고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으며, ESG 주제를 투자 관행 프로세스와 회사 경영에 통합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수탁자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점차 법적 도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

(CA100+)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투자자 주도의 이니셔티브임. 5개 지역 투자자 네트워크와 5개 투자자 대표에 의해 2017년 출범함. 투자자 네트워크는 AIGCC-아시아, CERES-북미, IIGCC-유럽, IGCC-Aus&NZ, 그리고 PRI를 포함함. 투자자 700명,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 규모로는 68조 달러(약 9경원) 이상이 참여 중이며, 이는 33개 시장과 전 세계 AUM의 50% 이상에 해당됨. 166개 포커스 기업(아시아는 34개)이 산업용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80%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강화
- 파리 협정의 목표에 따른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
- 기후 관련 금융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른 기업 정보 공개 강화(해당하는 경우)
- CA100+ 공개 프레임워크 및 정렬 평가 지표

(투자자의 주주관여 방법)

투자자는 기업과의 미팅 개최와 비공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회사 공문 작성 등 비공개로 관여하거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관한 주주결의, 이사 선임/해임 찬반 투

표, 회사와의 공동 성명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음. 기후 관련 주주 결의 중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투명성과 가시성 향상
- 스코프 1~3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의 넷제로 사업이 되기 위한 약속
-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목표를 포함하는 파리 협정에 일치 비즈니스 전략 및 해당 전략에 필요한 주주 승인
- 기후와 에너지 정책 관련 로비 활동 공개

(기후 관련 주주 결의 트렌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미국은 기후 관련 결의안 236건이 2022년 북미 기업에 제출됐고, 결의 철회를 대가로 110개 기후 관련 약속을 받아냄. 유럽은 주주제안 기후변화 결의 지지의 숫자가 2021년에 비해 적지만 지난해보다 훨씬 엄격한 요구들이 있었고, 2022년 경영진이 제안한 'Say on Climate' 결의안이 증가함

***Say on Climate:** 주주에게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의 정보 투명성을 지지함

(기후 관련 결의 사례)

1. HSBC 주주총회 (2021): 이사회에서 제안한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에 대해 주주의 99.71%가 지지함. 모든 섹터에 걸친 금융 서비스를 파리협정의 목표와 타임라인에 맞추기 위한 단기/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EU/OECD에서는 2030년까지, 그 외 시장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 사업의 자금 조달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공표하여 실시하는 내용임. 진척 상황에 대한 연차 보고 중에 있음



엘리자베스 우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아시아 기후에너지팀 변호사
글로벌 주주관여 법제 동향

2. 엑손모빌 주주총회 (2021): 투자자 지명의 기후 친화적인 후보자 3명이 엑손모빌 경영진 지명인을 이기고 이사회 의석을 획득함. 또한 엑손모빌 로비 활동(직접 및 무역협회 경유)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이에 불일치한 로비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64%의 지지를 받음
3. 엑손모빌 주주총회 (2022): 국제에너지기구 2050 넷제로 모델이 재무제표의 가정, 비용, 추정치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결의가 52% 지지로 통과됨. 파리 협정의 목표와 일치하는 운영 및 제품(스코프 1, 2, 3)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공표하는 결의안이 28% 지지 받음

(아시아 기후 관련 주주 결의 가이드라인)

ClientEarth와 AIGCC의 합작으로 작성된 "[A guide to shareholder climate resolutions in Asia](#)"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음. 아시아 11개 지역에 걸친 지역 전문가와 각 지역별 차이가 있는 방법과 허용 범위 등을 반영해 지역적 맥락에 맞춰서 작성됨



민창욱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한국의 주주관여 법제 동향

기후 관련 주주관여 전략은 1) 비법적 주주활동: 서신, 대화, 모니터링, 캠페인 2) 법적 주주권 행사: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주주권 행사로 구분됨

(주주제안의 대상)

상법 제362조의2의 해석상 주주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주주총회 권한 사항’에 한하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음.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은 특별결의의 대상과 보통결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나뉠 수 있음. 특별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을 충족하는 결의로서 정관변경, 영업양수도 및 합병, 이사 해임, 해산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을 충족하는 결의로 이사·감사 선임, 이사의 보수, 주식 배당 등에 대한 사항임

이렇게 주주제안건이 제출될 경우 이사회는 이것을 받아 보고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경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정을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이사회는 상법이 정한 주주 제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들(주주 개인의 고충, 상장회사 임원의 임기 중 해임,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됨

(주주제안의 요건과 효과)

주주가 요건을 갖춰 주주제안을 하면,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주 요청 시 의안에 대한 설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 제안 요건: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되어야 함. 또한 일정 지분을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만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3% 이상의 주식, 상장회사는 규모에 따라서 0.5% 또는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 주주 또는 3%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만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요건은 한 명이 아닌 공동의 소수주주가 갖추어도 무방함

- 이사회 의무: 주주제안 제출 후 이사회는 이를 검토해서 적법한 주주제안이라는 판단이 되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함. 이사회가 적법한 주주제안을 주총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는 의안상정 가처분이 가능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321 결정). 또한 이사회는 상법에 따라 주주 요청 시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결의의 효력: 주주제안이 통과되면 결의 즉시 법적 구속력을 지님. 즉, 제안된 안건에 대해 회사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한국 상법에는 아직 권고적 주주제안이 존재하지 않음

(주주제안 한계)

개별 기업의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주주제안’의 안건은 ‘정관변경’(특별결의) 또는 ‘환경 전문가 이사 선임’(보통결의)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이에 비해 미국은 한국보다 주주제안권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한 주주제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사례로 코스트코의 탄소중립 목표 채택, 필립스66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공시, JP모건/BOA/시티그룹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정책 등이 있음

(한국의 주주제안 동향)

2012년~2021년 한국의 주주제안 제기 건수는 코스피 상



민창욱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한국의 주주관여 법제 동향

장사 99개에 대해서 550건, 코스닥 상장사 433개에 대해서 841건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됨.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 개최된 2017년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16년 75건 → ‘17년 154건 → ‘18년 214건)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가결률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음. 한국의 전체 주주제안 안건 중에는 임원의 임명에 관한 안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관 변경 안건 중에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안건이 과반을 차지함. 정관변경 안건도 일부 존재하며, 이 중에는 이사회 운영(조직 변경 등 개선, 이사의 자격, 정원 확대)이 과반을 차지함

(주주제안 사례: HDC, 2022)

아직 한국에서는 상법상 제약 등으로 인해서 기후 관련 주주제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으나, ESG 중 S 분야인 안전에 관한 안건에 대해 의미 있는 주주제안 안건이 제기된 바 있음. 2022년 1월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물이 붕괴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경제개혁연대(NGO)는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의 위임을 받아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기했음. 아래 네 가지 안건을 기재함:

1. 지속가능경영, 안전경영 및 건설 관련 법령 준수 등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2.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3. 이사회 내에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4.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안건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안건은 찬성 30.6%, 반대 69.4%로 부결됨. 정관 변경 또한 당시 HDC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1.08% 정도였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특별 결의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나 한국의 의결권 자

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ESG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권고했고, 국민연금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됨

(주주제안 사례: KT, 2023)

경제개혁연대가 APG의 위임을 받아서 2023년 2월 16일 KT를 상대로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출함. KT가 2020년 11월에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NGO는 당시 KT가 보유한 자사주의 80%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데 활용됐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기하며 1) 매년 주총에서 자사주의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고 2)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주총의 승인을 받을 것과 함께 마지막 안건으로 3)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할 것을 제출함. 제안된 권고적 주주제안의 요건을 6개월 전부터 발행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보통 결의로 통과할 수 있으며, 만약 가결될 경우 차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행 여부와 내용 및 미이행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주주제안: 입법론)

한국은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ESG 또는 기후와 관련된 주주제안이 다시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 1월에 국회에 상법 제363조의2를 개정해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안이 계류되어 있음.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5항에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따르지 않기로 주주제안을 결정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사실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음

| 종합토론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

(투자 활동 전반의 탄소발자국 제약) APG에서는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는 제도를 통해 투자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음. 탄소예산을 정해놓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피투자기업의 탄소배출량을 합산했을 때 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함. 해당 탄소예산은 점차 줄여나가서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는 약속을 맺었음. 따라서 피투자회사가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회사들에 투자할 수 없게 하는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주주관여 등 기후 관련 행동을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

(책임투자팀 활동 영역) 책임투자팀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동원해서 활동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최근에는 CA100+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CA100+가 커버하지 않는 회사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회사들을 각국마다 10개 사씩 모아서 관여하고 있음. 현재는 한국에 10개, 일본에 10개 있지만 대상을 인도와 중국으로 서서히 넓혀가며 업종별 관여활동을 펼치는 이니셔티브인 “Cross-sector Focus 10 initiatives”를 실행할 예정임. 최종 목표는 아태지역에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여하는 것임. 지속적으로 관여의 강도를 높여가는 “Progress”와 회사의 재무나 금융에 대한 기반으로 당장 밟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의 전달을 통한 “Impact”를 계속 추적하고 있음. 이에 반해 투자 배제나 철회는 효과가 없는 방법임. 또한 가장 효과적이지 APG에서 추구하는 주주관여는 공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강요가 아닌 회사가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임. 앞으로는 “Progress”와 “Impact”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활동이 주가 될 것임

(HDC 및 KT 사례 시사점) HDC 사례로 한 번의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제안 결의는 시작점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 KT 케이스는 ESG의 기반은 좋은 거버넌스라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임

윤세종 Plan 1.5 변호사

(“님비”가 아닌 “님기” 현상)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 목표를 세우고 있지

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초기 대응보다 후기 대응에 집중되어 있음. 마치 “님비” 현상처럼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재정 부담과 시기상조의 문제로 나중에 기술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Not In My 임기” 혹은 “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장기 리스크 대응과 골든타임 문제)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지 자체보다도 달성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빠른 행동이 중요함. IPCC는 1.5°C를 지키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 이는 초창기에 급속도로 감축하고 감축하기 어려운 영역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임. 탄소감축이 이 경로를 따르지 못할 때 목표하는 온도 상승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며, 이는 기업의 리스크와 경쟁력 차원의 관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됨. 기업은 기후 대응을 더 빠르게 수행해야 함

(인센티브 문제) 현재 기업이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하고 장기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구조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현행법상 주주관여 장벽) 우리나라 법제도상 주주관여를 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됨. 일본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관변경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제안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이 낮기 때문임. 따라서 권고적 주주제안도 현재 범위 내에서 최선책이라고 봄

(Universal Owner의 역할)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도 주주관여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여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빅웨이브라는 청년 기후 환경 단체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한 주주 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음. 이런 관심이 힘을 받으려면 연기금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의결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함

| 종합토론

발레리 관 AIGCC 주주관여 정책 디렉터

AIGCC는 5개의 CA100+ 설립 파트너 기관 중 하나로 역내 투자자, 대표, CEO들이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음. 네트워크가 생긴 계기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자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힘을 빌려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였음

68조 달러(약 9경원) 이상의 운용 규모를 망라하는 지금은 AIGCC가 간사로서 CA100+에 동참하며 체결 기업들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톨 개발 등의 수단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일례로 10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넷제로 기업 평가 지표 벤치마크를 개발해서 투자자들이 수탁자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해당 톨을 참고해서 직접 기업 경영진들과 대화하거나 이사회의 책임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대부분의 주주관여는 전환 계획과 뚜렷한 마일스톤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함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팀 상무보

(포스코의 ESG) 포스코는 2022년 3월 2일 포스코 홀딩스 체제를 출범함. 포스코는 2018년 기업 시민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함. 2020년 3월 TCFD를 선언했고 2020년 12월 유럽을 제외한 철강사로는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함. TCFD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후 행동 보고서를 발간함. 이 과정에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주주 관여 활동) 2015년 파리협정과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 발간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주들의 관여 활동이 실제로 증가함. 포스코는 클라이밋액션 100+의 관여 대상 기업으로 포함됨. 홀딩스의 IR팀과 포스코의 ESG팀 및 탄소 중립 전략 그룹은 컨콜을 진행해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내부로 전달함. 투자자들의 요구를 내부로 전달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보완 방향) 탄소 중립 선언 이후 로드맵 이행 방안, 단기와 중기 목표의 부재, 탄소 감축 이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질문이 많음. 주주들은 IFRS, SEC, EU의 ESRS 등 공시 제도와 관련해 궁금해함. 소통과 공개가 중요함.

포스코는 지속가능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시 중임.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임.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그 목소리를 회사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임재문 LG디스플레이 ESG전략팀 팀장

(ESG 구조) LG 디스플레이는 2022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만들. 비즈니스 관점의 '기술 중심'과 운영 관점의 '인간 존중'에 기반해 핵심 영역을 선정함. 기후 대응, 자원순환, 유해 물질 관리, 제품 책임, 사업장 안전, 협력사 관리, 인권 경영, 인적자본을 핵심 영역으로 선정함. ESG 위원회, CEO, ESG 위원회 사무국, 분과 위원회, C-Level, 실행조직으로 구조화됨

(ESG IR 인게이지먼트 사례) 2022년 총 20건의 IR 인게이지먼트가 있었음. 20건 중 공식적으로 ESG 리포트에서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6건이 진행됨. 지배구조, 기후 위기 대응 및 전략, ESG 평가등급의 고평가 배경, 탄소 감축 전략, 파주 사업장의 안전사고 후 진행 동향, 온실 배출 현황 및 관리에 관한 답변 요구가 있었음. LG디스플레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임

(ESG 실사) LG디스플레이는 2022년부터 5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실사를 시행함. 제품 생산과 연관된 모든 협력사가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을 운영하도록 대응함

이재원 SK바이오사이언스 가치혁신실 PL

한국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도입됨. 최근 환경 관련 질문이 늘고 있기에 법적 제도 또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됨. 주주들의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 리포팅 요구에 대응해 ESG 리포트를 발간함.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TCFD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24년 RE100과 2031년 넷제로 전략을 수립함.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변화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함.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ESG팀과의 적극적 미팅으로 회사의 노력을 전달하고 시장이 원하는 기업의 역할을 이사회 경영진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함. 앞으로 ESG 관련 주주 관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선제적으로 소통할 것임

| Q&A

Q. 주주 관여의 구체적 방법 중 많이 이용되는 방식과, 한국 기업의 기후 대응과 주주 관여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발레리 칸 AIGCC 주주관여 정책 디렉터

주주 관여 틀에서 더 선호되는 방법이 있지 않음. 시점에 맞는 다양한 틀을 사용해야 함. 아시아에서는 기업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기업의 의지가 중요함. 한국 기업의 기후 대응과 주주 관여에 대한 순위를 매길 수 없음. 평가 지표의 한계, 업종별 특수 사항, 국가의 역할 등이 존재하기 때문임. 국가의 포지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임

Q. 책임 투자의 방법론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포지티브 스크리닝이 있다. 글로벌 투자자나 연기금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넘어 포지티브 스크리닝을 하는 사례가 궁금하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포지티브 스크리닝으로 이어짐.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남은 투자는 새로운 투자처로 가는데, 이때 포지티브한 회사로 자금이 이어지기 때문임. 네거티브 스크리닝 과정에서, 노력은 하지만 결과를 보이지 못한 회사가 투자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음. 투자자와 기관, 마켓이 기업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고민임. 또한 주주 관여는 장기적 주주와 기업 이사회 간의 대화로 주주의 공격이 아님을 강조함

*네거티브 스크리닝 :특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 전략임.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반대 개념으로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임

Q. 국내 투자자의 소극적인 주주관여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를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궁금하다

윤세종 Plan 1.5 변호사

국내 주주 관여에서 기후 변화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음.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에 대한 부담

이 있고 다른 기관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화해야 함. 기업과 시민사회의 소통 범위를 넓히기 위해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제시함. 이를 통해 소통의 범위를 넓히고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음

Q. 주주 관여와 시민사회의 관여에 대한 제안과 포스코의 저탄소 전환 노력이 궁금하다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팀 상무보

주주 관여와 시민사회의 관여에 대한 해결 방법 중 대화가 가장 중요함. 기업의 한계와 추가 계획을 투자자와 이야기해야 함. 포스코는 경제성과 탈탄소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음.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위해 투자를 시작함. 2035년 공정이 개발되면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스크랩 사용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음